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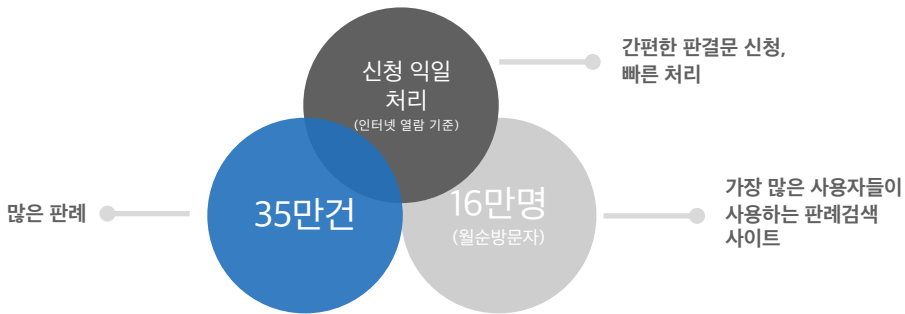
# CaseNote

판례를 검색하는 더 나은 방법



# 케이스노트 프로

케이스노트에서 더 많은 판례를 검색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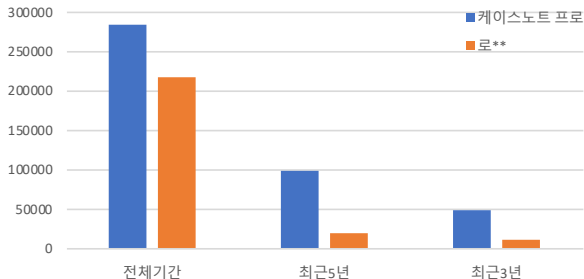


# 최대 규모의 판결문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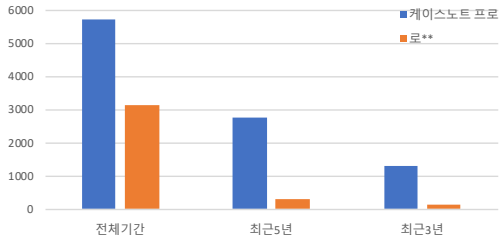
프로 회원 및 기관 회원은 판례검색 사이트 중 최대 수준인 35만 건의 판례를 검색·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판례의 경우, 경쟁사 대비 월등히 많은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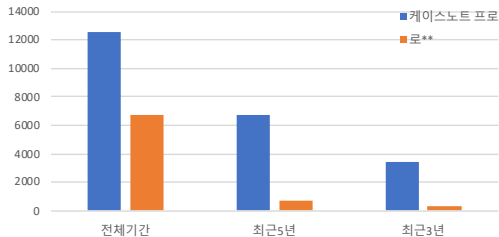
### "선고" 검색결과 수



### "주주총회" 검색결과 수



### "이사회" 검색결과 수



# 간편한 판결문 신청, 빠른 처리

판결문 신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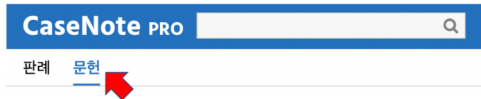
- 법원 사이트에서 번거롭게 개인정보를 넣어 신청하는 대신 케이스노트에서 법원, 사건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법원 인터넷 열람에서 구입 가능한 판결문은 영업일 기준 다음 날까지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 판결문 신청 메뉴에서 자신이 신청한 판결문의 처리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판결문 신청에 따른 별도 추가 비용은 없고, 신청 건수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 다양한 법률문헌 서비스

## • 법률논문 검색·열람

프로 회원 및 기관 회원은 케이스노트에서 125종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1만 건을 검색하실 수 있으며, 원문 PDF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주석서 열람

프로 회원 및 기관 회원은 케이스노트에서 최신판의 상법(회사법), 상법(총칙상행위), 형법총칙, 형법각칙, 형사소송법, 주석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주석 상법 회사(제6판) 전 6권 - 2021년 6월 발간
- 주석 상법 총칙/상행위(제4판) 전 2권 - 2013년 9월 발간
- 주석 형법 총칙(제3판) 전2권 -2020년 3월 발간
- 주석 형법 각칙(제5판) 전 6권 -2017년 11월 발간
- 주석 형사소송법(제5판) 전 4권 -2017년 11월 발간

## • 특허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프로 회원 및 기관 회원은 케이스노트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례를 검색·열람하실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조세심판원의 결정례도 2022년 초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율촌**



**삼성물산**

법무법인(유) **충정**



**부산광역시교육청**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많은 전문가들이  
케이스노트 프로를  
선택하셨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최신 판결 리스트

CaseNote PRO

##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최신 판결

업데이트시 알림 받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자인 소송의 최근 판결 목록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5188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결문 입수중](#)

원고: 원기업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재판부: 제7행정부 (다)  
결과: 2021. 12. 23. 원고패

**서울고등법원 2021누41978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 [판결문 입수중](#)

원고: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재판부: 제7행정부 (나)  
결과: 2021. 12. 23. 원고패

**서울고등법원 2019누40101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JPMorgan Chase Bank, N.A.) 외 1명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재판부: 제3행정부 (가)  
결과: 2021. 12. 9. 원고패

**서울고등법원 2020누62299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재판부: 제3행정부 (다)  
결과: 2021. 12. 9. 원고일부승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자인 최신 판결들의 결과와 판결문을 바로 바로 업데이트 받아보세요.

- “업데이트시 알림 받기”를 선택하시면, 최신 판결들에 대한 정보들이 업데이트될 때 마다 이메일로 알림을 보내 드립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등 다른 기관들에 대한 판결문들로 서비스 확대 예정입니다.

CaseNote PRO  홍길동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공2010하,1664]

판시사항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호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조립·생산 작업의 의장공정에 종사하면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해온 甲 자동차 제조회사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甲 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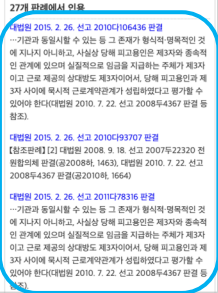
[3]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이른바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 요건 및 그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제3자의 노동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2]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호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조립·생산 작업의 의장공정에 종사하면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해온 甲 자동차 제조회사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PDF를 다운로드받아 판례 원문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판결문에서 현재 열람하는 판결문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 인용 부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목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목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울산공장 내 사내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와 달리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목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원심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의 위법이 없다.

### 2.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및 효과에 관하여

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공포)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문의 중요 부분을 하이라이트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자신만의 메모를 남겨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메모 작성

현재 사건과 고용계약관계 비교 필요 |

취소

저장

# 특정 판결문을 인용하는 판결문 검색

CaseNote PRO



홍길동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는 판례](#)

총 106건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7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공2010상, 298),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공2010상, 474)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74),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공2009상, 900),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공2010상, 298)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인정...\)\]](#)

】 [1]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제118조, 제129조, 제215조,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58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제118조, 제129조, 제215조,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74) 사 건 2015도10648 가.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인정된 죄명 :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나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관세법위반·관세사법위반·외...\]](#)

】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8조의2 /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7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공2010상, 298),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공2011상, 1080) / [2] 대법원 2011. 5. 26.자 2009도1190 결정(공2011하

인용 판례 내에서 검색

정렬

- 정확도순
- 최신순

법원

- 전체
  - 대법원
  - 고등법원·특허법원
  - 지방법원·행정법원·가정법원
  - 헌법재판소

사건종류

- 전체
  - 민사
  - 형사
  - 행정
  - 특허
  - 가사

특정 판결문을 인용하는 판결문들에 대해서만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조문을 인용하는 판결문 리스트 제공

## 상법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 7. 24.>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 7. 24.>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4. 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한글 조문

개정 연혁

⑤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  
 법률 제6488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1. 7. 24. 시행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법률 제1000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 155개 판례에서 참조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12049059 판결

--- 신주 등을 발행함으로써 인하여 원고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과 같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의 경우에 있어서의 상법 제418조 제4항의 사전통지 또는 공고 제도의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 발행주식은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이며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에서 요구되는 주주에 대한 통--

#### 서울행정법원 2021. 6. 25. 선고 2020구단64524 판결

---가람 소요되는 유상증자 진행 기간 중 신주배정일로부터 신주청약 전까지 신주인수권 중추가 상실되어 가해지는 최대 1개월 정도만 거래 가능한 한시적인 유가증권인 집(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420조의2, 제420조의3), 기중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되었던 20%의 단월 세율을 구 소특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5. 14. 선고 2020가합101046 판결

---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다는 사실,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국제 채산 및 4대 보험료 연체 등 의의자료에 해를 끼친 유상증자 안건이 상정된다는 사실은 통지하였을 뿐, 기종일 2주전에 기준일을 공고하지도 않았고 심판요고 회고를 2주전에 걸쳐서 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상법 제418조 제3항과 상법 제419조 제2항,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다.

#### 창주지방법원 2021. 4. 2. 선고 2019가합10221 판결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되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

#### 광주고등법원 2021. 2. 17. 선고 (민주)2020나110454 판결

가) 상법 제418조는,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제1항),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신주의 총유와 수, 신주의 발행가격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등을 납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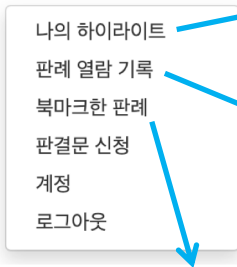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2. 17. 선고 2020가합103295 판결

---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등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하고(상법 제416조),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상법 제418조 제1항), 피고는 2016. 6. 30.부터 2019. 6. 11.까지 10회에 걸쳐 총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것인지, 주주에게 신주--

판결문들에서 특정 조문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 인용 부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개인화 기능

판례 열람 기록, 하이라이트, 북마크한 판례를 별도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검색한 판례를 다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세요.



CaseNote PRO

▼ 기본 폴더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부당이득금]

▼ 회사법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이사회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

취소 저장

▼ 민사소송

- 집행

새로더

CaseNote PRO

5개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

...사회결의 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이 때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 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 는...

2021년 2월 23일 작성  
상대방 약식에 대한 회사의 증명책임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 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이 때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었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 으로서는...

CaseNote PRO

판례 열람 기록

2021년 2월 24일

- 오후 3:40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 오후 3:40 서울고등법원 2007. 5. 29. 선고 2005노-23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 오후 3:40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 오후 3:23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 오후 3:13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2021년 2월 23일

- 오후 3:23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
- 오후 3:22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오후 3:08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부당이득금]
- 오후 3:07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부당이득금]
- 오후 3:06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 감사합니다.

## CaseNote

판례를 검색하는 더 나은 방법

(주) 케이스노트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69, 12층 1403호

[contact@casenote.kr](mailto:contact@casenote.kr)

070-8098-5135